



국가안전보위부의 급부상과 탈북민대상 공작실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연구소 편집위원
중앙대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주체사상의 종언>, <10년 후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뿌리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지난 1973년 5월 공식 창설되었다. 그러나 그 역사와 뿌리는 제법 깊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시초는 8·15광복 직후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였다. 물론 이 기구는 국내 치안과 보안을 위한 기구이지 정보기관이라 보기는 어렵다. 1948년 9월 9일 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으로 이관, 특수정보처에 이어 정치보위국으로 개칭하고, 전쟁중인 1951년 신설된 사회안전성 산하로 흡수되었다. 1952년 10월 다시 내무성으로 이관되고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으로 복귀하였다. 1973년까지 사회안전부에 소속되었으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같은 해 5

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무원 소속하에 있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에 관한 부문만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정치보위부로 출범하였다.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하였다가 1993년 다시 지금의 국가안전보위부로 변경하였다. 김일성 부자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반체제사범의 색출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방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의 관리를 맡고 있다. 그밖에 반탐(反探), 즉 대간첩 업무와 해외정보의 수집, 해외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국경경비 및 출입국 관리업무도 맡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과 유사한 호위사령부와 협조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를 경호하는 일도 한다. 조직은 1명의 부장 아래 조직·선전·간부·검열·후방·철도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직할시와 도·시·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다. 그밖에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를 비롯하여 군대의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 휘하 각 중대에 이르기까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여 그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김일성 생존 당시에는 국가 주석 직속이었으며, 현재는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직접 통제하에 있다고 알려진다. 김일성·김정일 부자 독재를 위한 강령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현 김정은 3대 세습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북한은 매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보위부만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 구성의 변동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발전해 있어 시민혁명, 주민봉기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비밀경찰 조직을 비교해 볼 때, 전형적인 정치경찰은 프랑스혁명 후 J.푸세에

의하여 창설되어 나폴레옹 3세를 거쳐 프랑스 제3공화국으로 계승되었다. 19세기 프로이센의 정치경찰도 이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완성 형태로 볼 수 있는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Gestapo: 국가비밀경찰)는 유대인과 자유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소련의 체카(VCHK: 전러시아 반혁명·사보타주 단속 비상위원회), 게페우(GPU: 국가정치보안부), 엔카베데(NKVD: 내무인민위원회), 케이지비(KGB: 국가보안위원회) 등도 유명하다. 그리고 일제하에서의 악명 높던 고등경찰은 잔학한 만행으로 수많은 한국의 애국지사 및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함으로써 한국 민족사상 불식될 수 없는 치욕과 통탄을 남겼다. 미국에는 정치경찰은 없으나, FBI(미연방수사국)에 의한 좌익 분자 색출과, 과거 非美활동위원회(UAAC)에서의 반미정치활동조사 등이 이루어져 한때 거센 매카시선풍이 정계·관계를 몰아친 적도 있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그 악랄성을 대변해주듯 초대 부장 김병하는 권총자살, 제2대 부장 이진수는 황해북도의 한 군에 내려갔다 숙소에서 밤나무 가스를 먹고 사망하였으며, 사실상 제3대 부장인 김영룡 1부부장도 권총자살하는 등 독재체제 유지에 기여한 만큼 징벌 또한 강하게 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때 기세를 올리던 류경 부부장은 지난 해 초 서울을 다녀간 직후 ‘간첩협의’로 총살당했는데, 장성택의 권위에 도전하다 제거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여 이진수 이후 부장을 두지 않고 제1부부장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 올해 4월 김정은이 김원홍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대장)을 20여 년 공석이던 부장에 임명하였다.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 제고

‘선군’에서 ‘선당(先黨)’, ‘선경(先經)’으로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

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경찰조직인 인민보안부는 1995년 고난의 행군 직후부터 자신의 사명을 상실하면서 군부에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이 ‘총대정치’를 주장하며 군대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를 강조하다보니 자연 사회통제기관들은 영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시대에는 노동계급이 주인, 김정일 시대에는 군대가 주인이더니 이제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을 정도다.

김정은 시대의 최고 실세인 장성택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하는 행정부장이며 동시에 모든 공안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다. 과거 공안담당 비서였던 계응태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다. 장성택은 201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거기서도 그의 업무는 공안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위치였다. 장성택은 현재 노동당 경공업 부장인 박봉주 등을 이끌고 지난 2002년 서울을 방문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국가발전의 ‘참모텔’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군대는 병영으로 돌아가고 군대의 사회통제력을 저하시키며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면서 당분간 ‘개발독재’를 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재생산에 절대적이라는 판단을 장성택은 하게 된 것이다.

선군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사회범죄현장에도 뻗질나게 나타나던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행패는 지금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때 김정일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군대의 보위사령부를 풀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인민군 보위사령부도 자기의 업무에 대해 국가안전보위부가 요구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일원화 체계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확립되어 가고 있다. 마치 12·12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에 휘둘리던 시절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경찰조직인 인민보안부도 실세인 이명수 대장(전 북한군 작전국장)이 2010년 부장으로 임명되

면서 과거의 사회통제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다. 참고로 여기 북한 국가 안전보위부의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통일 과정 중 동독에서 회수된 공문서 하나를 실례로 들어본다.

출처: MfS-Abt. X Nr. 244 96-96쪽

베를린, 절대비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안전상 에리히 밀케 동지

존경하는 상 동지!

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안전성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안전을 공동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이번에 또다시 전용비행기를 내어 전문가들과 함께 6만6천 마르크 분의 기술기재를 또 보내온다는 편지와 우리 국가보위부 전자 계산기대표단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국가보위부 전자계산기대표단 구성과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단 구성

단장 리종성 부처장

단원 박정혁 과장

단원 현유석 과장

통역(로어) 최창선 지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

부장대리 김영룡 서명

1989년 3월 15일

평양

국가안전보위부의 탈북민 이용 공작실태

현재 중국에는 탈북민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무려 수백 명이나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은 모두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3~4명 1개 조의 경우 소장

은 대위 내지 소좌, 나머지 조원들은 대부분 중위 내지 상위의 젊은 요원들이다.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부와의 협의하에 국경 일부지역에서 무기를 휴대하도록 허가받았으므로 전부 무장을 갖추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09년 6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대 합의를 보았는데,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신생체제가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을 따를 테니 대신 탈북민들을 철저히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만약에 그런 대책 없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인구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800만 명 정도가 중국을 거쳐 탈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뒤 인민무력부 소속이던 국경경비대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선 부대들에 탈북민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사살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 뒤부터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탈북 완료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체포 역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국가안전부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에 퍼져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은 탈북민들을 한국 내 ‘간첩’으로 들여보내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훈련시킨 탈북민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와 시기와 환경 등을 고려하며 한국으로 들여보내고 있으며, 또 해외로 나온 일부 탈북 ‘공작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 보위부는 여성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 보위부 소속으로 한국의 정보당국에 체포된 여성 공작원만도 3명이나 된다. ‘007’이란 영화가 보여주듯 미인계보다 더 확실한 첩보수집은 없다. 원래 반탐을 공식적 목적으로 창설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오늘은 정탐과 첩보전으로 그 영역을 과감하게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식당의 부책임



▲ 보위부에 포섭된 탈북여간첩 원정화(왼쪽)와 당원중, 단파라디오 등 간첩증거물

자들은 모두 보위부 요원이며 그들은 식당을 거점으로 정보수집과 탈북민 색출공작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국가안전보위부의 탈북민 대상 공작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치자금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탈북민을 이용한 간첩활동보다 더 경제적이고 수월한 대남침투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절 북한이 간첩 1명 양성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으나 오늘은 줄을 잇는 탈북민 행렬에 슬쩍 공작원을 끼워 넣으면 그만이니 이보다 더 수지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단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움직임이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남북한의 첩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北韓**